

인권 자료실		
98 5/21	A2-5	225

# 보 도 자 료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JOINT COMMITTEE OF MIGRANT WORKERS IN KOREA  
전화(02)744-9063 천리안: JCMK e-mail:jcmk@chollian.net

수신 : 각 언론사 외국인(이주민)노동자 담당 기자

발신 :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외노협)

일시 : 98년 4월 9일

내용 : 1- 귀환 희망 외국인노동자 미해결 문제 접수 센터 개설

## 귀환 희망 외국인노동자 미해결 문제 접수 센터 개설하다

1. 제한 외국인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 보호를 위해 즉 활동을 해왔던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는, 정부의 무리한 출국조치로 인하여 밀린 월급조차 받지 못하고 떠밀려 나가고 있는 외국인노동자의 실정을 집계하고 이들에 대한 구제방안 마련을 위해 [귀환 희망 외국인노동자 미해결 문제 접수 센터]를 개설하기로 하였다.

2. 외국인노동자의 상당수가 임금체불, 산재(사망)보상, 사기 등의 이유로 출국이 가로막혀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출국 벌금이라도 덜 수 있는 기회인 사면기간이 지난 4월 3일로서 실제 마감되고 정부의 '12만 명 강제 출국' 의지에 따른 단속이 예상되는 시점에 개설되는 것이어서 접수률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3. [접수 센터]에서는 귀환을 희망하는 외국인노동자가 출국을 하지 못하는 사유, 예를 들면 임금체불, 산재(사망)보상, 사기, 빈한, 벌금 등의 상담을 접수하고 각 유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나 노동부, 법무부 등등에 집단 고발(진정 등)을 할 계획이다.

그러나 4월 들어 단속 때문에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된 외국인노동자들이 직접 방문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 측은함마저 주고있다.(자신의 문제를 직접 방문하여 호소할 자유마저 없는 상황이다.) 결국 전화 접수가 주종을 이룰 것이며, 아직 접수 센터를 모르는 노동자들은 각 상담소를 이용할 것이므로 이를 취합할 예정이다.

4. 또한 민주노총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 신고 센터'와 한국 노총의 '법률구조센터'와 연계하여 공동처리를 할 계획인 점이 특기 할 만하다. 이른바 'TMF 시대'를 맞아 내국인 노동자의 상담이 급증하듯이 외국인노동자도 똑같이 생존권과 노동권의 위협을 받고 있음을 인식하고 내국인노동자가 단결하여 함께 위기를 극복하자는 의도를 담고있다.

5. 상담 건 해결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각 지방에서도 이러한 연대를 준비중에 있다. 이미 '부산 경남 지역 외국인노동자 상담 및 지원단체 모임'에서는 '부양지역 민주노총 지부 부당노동행위 신고 센터'와 연계하여 위와 같은 상담활동을 개시하고 있다.

6. 끝으로, 이미 3D업종의 주력 군(群)이 된 외국인노동자를 마치 국내노동자의 실업을 상충 원인으로 분류하고 이들에 대한 강제 출국 의지를 보이는 정부는 단속만이 능사가 아님을 알고 '선(先) 문제해결'을 통해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출국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 외국인노동자 대책협의회 기자 회견문

- '귀환 희망 외국인노동자 미해결 문제 접수 센터'를 개소하며-

## 1. 최근 외국인노동자의 실태

법무부의 지난 4월4일 밝힌 자료에 의하면 사면 기간동안 한국을 떠난 외국인노동자는 4만7천7백여 명이 한국을 떠났으며, 현재 한국에는 10만5천명의 불법 체류자와 산업연수생 3만7천여 명 포함 14만2천 여명의 외국인노동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제3국으로의 밀항자를 제외하더라도 밀입국자, 조선족을 포함하면 현재 18만여 명 이상의 외국인노동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 2. 귀환희망 외국인노동자의 문제

최근 들어 한국이 IMF의 상황에 접어들면서 전체 1/3의 외국인노동자들이 한국을 떠나고 있다. 그리고 현재 남아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조만간 일자리의 불안으로 한국을 떠나가고 있다. 그러나 현재 많은 외국인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지 못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이 많다. 지난 3월9일-14일 동안 '외국인노동자 대책협의회' 사무국에서 회원단체 10개를 표본조사 하여 접수하여 자료를 분석하여본 결과 귀환 희망 외국인노동자문제 1,222건을 접수되었으며, 합의가 필요한 산재, 사망, 등의 사건을 제외하고 이들이 빼앗긴 노동의 대가는 11억 1백 6십5만2천5백6십1원에 이른다고 1차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이미 월급을 해결 받지 못하고 본국으로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확인되지 않은 많은 외국인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의 대가를 찾지 못하고 있으며, 비행기표를 구입하여 놓고 월급을 받으면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밀린 월급을 받지 못하여 돌아가고 싶지만 비행기표도 구하지 못하여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 3. 외국인노동자문제 해결을 위한 외노협 활동보고

그동안 우리는 귀환 희망 외국인노동자문제 해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3월9-14일 외국인노동자문제 표본조사 및 발표

3월22일 외국인노동자 대책협의회 주최 명동성당 집회 및 파고다까지 거리행진

3월27일 경부선 주최 외국인노동자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 및 성명서 발표

4월2일 한국교회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의 복요기도회 및 기독교회관 앞 집회

4월3일 법무부장관, 노동부장관, 국무조정정책실장과의 면담 요청 등의 여러 가지 로비활동과 의사표시를 통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지속해 오면서, 관계당국의 정부의 합리적이고, 진취적인 정책과 성의 있는 답변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무 것도 해결된 것이 없으며, 최소한의 대화 요청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 4. 정부의 최근 정책에 대한 비판

관계 당국의 성의 있는 정책과 조치를 기대했으나 최근 나타난 외국인노동자관련 정책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 1) 외국인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여전히 거부하는 외국인 노동정책

정부관계기관의 어느 문서를 보아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말은 없습니다. 하나같이 '해외인력' '연수생' '조선족'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노동자를 상품으로 취급하는 시각이 교정되고 있지 못하며 값싼 노동력으로서 오직 활용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정책의 기저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흐름은 외국인노동자 문제를 해결하는 일선 지방노동 사무소에서도 지침으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노동부의 불법취업 외국인 관련 행동지도지침을 보면 '체불 등의 해결이 곤란한 경우 진술조서 또는 자술서 등을 받아 종결처리 되게 함으로서 '성의 있게 처리된다는 점을 진정인에게 주지시킨다' 라고 명기하여 일선 행정기관에 하달시키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야 할 노동부가 외국인노동자인권의 문제가 대두되자 '성의 있게 처리된다는 인상'을 심어주면 된다는 전시행정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2) 벌금제도에 대한 비판

법무부는 불법 체류자나 불법고용주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체류연장 외국인노동자에 대해서는 1개월 당 10만원 꼴의 벌금과 사면기간에 출국하였다 하더라도 3년 이내 국내입국 거부, 체류 연장 고용주에 대하여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의 벌칙을 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노동자나 영세중소기업인은 범죄자가 아닙니다. 모두가 자신들의 생존권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벌금제도를 통하여 국제 범죄자를 양산해 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2-3년 근무하였으나 1백5십만 원 이하의 임금 체불자는 월급도 받지 못하고 본국으로 출국하고 있습니다. 밀린 월급을 받으려다 오히려 벌금이 밀린 월급의 2배 이상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월급을 포기하고 출국을 시도하고 있으며, 지금도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벌금제도 자체가 임금을 받지 못하고 출국하게 만드는 강제추방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정부가 외국인노동자들의 월급을 떼어먹는 것이나 마찬가지 행태가 되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들로부터 거두어들인 수천 억에 이르는 벌금이 어떻게 쓰이는 투명하게 밝혀져야 하며, 법무부 예산 책정에서 벌금 수입은 제외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벌금으로 인한 기업주와 외국인노동자 단속 관계자와의 비리가 근절되어야 하고,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김포출입국 관계자들의 불법행위와 출국하는 외국인노동자를 이용한 금품수수 비리 행위를 먼저 근절하는 자성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 3) 강제출국조치에 대한 비판

최근 정부에서는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들을 강제출국조치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필요하면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집중 단속기간 외에는 고용하도록 방조하고, 인력수급 조절상 필요하다면 단속하는 기준 없는 이중 정책을 펴왔던 것을 비판합니다. 이는 법무부의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인권유린의 기초이었던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최근 들어 집중단속에 대한 발표에 대한 우리의 견해는 다릅니다. IMF 시대 이후에 집중단속은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이동의 자유'와 '밀린 임금을 받으려 갈 권리 박탈'에 지나지 않습니다. 일자리가 없으면 한국에 남아 있으라 해도 자진 출국하게 되어있습니다. 집중단속은 오히려 귀환을 희망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의 문제를 더욱 해결하기 어렵게 만드는 조치에 불과합니다. 이는 한국기업도 어려운데 외국인노동자들의 노동의 대기썸 적당히 떼어먹어도 괜찮지 않는가 하는 저급한 발상이라고 생각됩니다. 법무부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정책도 IMF 이후에는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4) 연수취업제에 대한 비판

정부는 지난 2월 9일 노사정 합의를 통하여 외국인노동자정책은 98년내에 마련하되 충분한 의견 수렴 후 결정하겠다고 전체국민이 보는 앞에서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12일 '외국인산업인력정책심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3월18일 산업기술연수생제도의 변형된 이름의 '연수취업제'를 실시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행정의 투명성과 노사정 합의 안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국민정부의 의지와는 전혀 다른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의견수렴도 충분하지 못하였고, 정책결정 과정도 밀실에서 소수에 의한 결정을 하였습니다.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관계 공무원조차 '외국인산업인력정책심의 위원회'라는 것이 있는지, '연수취업제'가 언제 정책으로 결정되었는지 모르는 행정, 국민도 모르는 행정은 결코 '행정의 투명성'이라 하지 않습니다. 연수취업제를 추진하는 관계자 자신들의 의견 취합을 '충분한 의견 수렴'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노사정합의 안이 지켜지지 못한 것이 국민정부 출범 1달이 안되어 벌어진 일이라면 신정부에 대한 우리의 기대는 점차 실망으로 변할 것이며, 이는 김대중 대통령의 뜻에도 어긋나는 일일 것입니다.

5) 대체고용에 대한 비판

정부의 '98년 외국인력정책 방향에 의하면 외국인노동자를 강제출국조치 시키고 내국인 실업자를 단순기능 분야로 흡수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중기청은 작업환경이 나빠 내국인들이 취업을 꺼리는 3D업종에 실업인력을 끌어들이기 위하여 작업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IBRD로부터 3천억원을 확보하여 제조업체가 외국인노동자대신 내국인 실업자로 대체할 경우 대체취업자 1인당 5백만원의 운전 자금과 대체취업자가 5명 이상일 경우 별도의 시설자금을 인원에 따라 1억 원 이상 장기 저리로 용자를 해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고용창출을 위한 대책이 아닌 대체고용으로서 경제위기의 원인을 모든 노동자에게 돌리고 '저임금, 장시간노동, 위해 사업장의 고통을 감수해온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기만이며, 국경을 초월하여 한국경제에 기여한 똑같은 노동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인 노동자를 이간시켜 한국노동자들이 이루어 놓은 생존권 투쟁의 성과마저 퇴보시키려는 것이며, '내국인이 3D업종을 기피하는 것은 아직 덜 배고파서 그렇다'는 무책임한 관계당국자의 발언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이미 한국에서 많은 상처를 입은 외국인 노동자에게 '내국인 실업사태의 주범'으로 몰아가는 모략은 부당합니다.

6) 새로운 연수생 1만5천여 명의 도입에 대한 비판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산업기술연수협력단 내에서는 3D업종에 대한 국내인의 취업기피로 연수생3만7천명 동결되어 새로운 연수생을 들여와야 하며 일부 보도에 의하면 98년에 1만5천여명의 연수생을 들여올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산업연수생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중기협 산업기술연수협력단과 계약한 민간송출업체들(혹은 브로커)에게 들이는 돈은 평균 2-3000달러에서 최고 5,000달러까지의 소개비와 보증금(약300만원)이 지출되며, 이탈방지를 위하여 보증예치금, 월급적립금, 또는 담보물을 등등을 강요하거나 이탈자들이 결국 이 돈을 떼이는 사례 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동허가제를 앞장서서 반대하던 재경원 000씨가 결국 뇌물수취죄로 구속된 일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이권 쟁기에 급급한 연수협력단과 송출업체가 온갖 이권과 비리의 온상임을 바로 알아야 하며 연수 협력단은 해체되어야 하며, 외국인노동자 관련 부분은 국가간 쌍무협정을 통해 이루어 져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반강제적으로 출국시키는 연수생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도입은 자기이익 쟁기기관 비난을 면할 길 없을 것입니다.

5. 정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촉구하는 우리의 행동 계획

국내외 노동단체와의 연대와 귀환희망 외국인노동자 미해결 문제 접수센터 개설 그리고 저항 최근 IMF 상황에서 발생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문제에 대한 충분한 문제 제기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부에



서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고충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정부의 성의 있는 답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은 점점 좁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외국인노동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 노동단체와의 연대, 국제 노동, 인권 단체와의 연대, 국제연합에 대한 제소, 등을 통한 정부단체에 대한 항의와 합리적인 외국인노동자 정책 대안을 위한 공청회 등을 열어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한국교회외국인노동자 선교협의회, 경블련 외국인노동자마을, 민주노총 부당노동행위 신고센터, 한국노총 법률구조 센터와 연대하여 '귀환희망 외국인노동자 미해결 문제 접수 센터'를 오늘 (98년 4월 9일) 민주노총 내에 개설하여 미귀환 외국인노동자만 아니라 이미 귀환하였으나 아직 해결 받지 못한 외국인노동자문제를 각국 대사관 및 현지 국제단체와 연대하여 미해결 문제를 접수를 받아 문제해결을 위한 법률적 조치를 해 나갈 것입니다.

외국인노동자의 산적한 현실적인 문제는 외면한 채, 정부가 단속과 벌금으로 외국인노동자를 탄압하는 정책을 바꾸지 않는 한, 외국인노동자관련 제 단체들은 연대하여 '벌금철폐와 임금체불 해결을 위한 공동 대책위'를 구성하기로 이미 결의한바 있습니다. 우리는 상호 연대를 통하여 강력한 대처를 해 나갈 것입니다.

#### 6. 기자회견을 마치며 - 외국인노동자가 남기고 간 말

IMF 이후 한국인들도 외국인노동자가 되기 위하여 일본 등지로 떠나는 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정부 관계자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습니다. 외국인노동자로 나간 한국인 노동자들이 해외에서 국내의 외국인노동자들과 같은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한 외국인노동자가 한국을 떠나면서 남긴 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 "한국 와서 남은 것은 잘린 손가락과 임금체불, 그리고 고향에 돌아가 값아야 할 빚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못 살게 군 한국 사람들에게 복수하겠다"는 말이 우리의 슬프게 그리고 섬뜩하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한국에 있을 때 도와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 은혜는 잊지 않겠다'는 말을 남긴 네팔 여성의 말은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듭니다.

이제 정부는 외국인노동자들의 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 대안과 귀환 희망자들이 자신들의 문제가 해결되어 자율귀환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1998년 4월 9일

###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귀환희망 외국인노동자 미해결 문제 접수 센터' 개소 연대 단체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한국교회외국인노동자 선교협의회, 경제실천불교시민연합

외국인노동자마을, 민주노총 부당노동행위 신고센터, 한국노총 법률구조센터

**HOT LINE 02-744-9062**



# 성명서

인권 자료실		
등	부	호
98 5/21	A3-5	221

98.3.22 명동성당

귀환 희망 노동자에 대한 실질조치 촉구와 정부의 노사정 합의 번복에 대한 규탄 집회

노사정 합의안을 번복하는 졸속행정 규탄한다. 연수취업제를 전면 백지화하고 이주노동자 관련 주체들의 공개적인 노사정 대토론회를 개최하라.

한국의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에서는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찾을 수가 없다. 정부가 표현하는대로 인간이 아니라 다만 "해외인력"이라는 상품에 불과하기 때문인가. 한국의 열악한 이주노동자 인권 실태에 대하여 국제 사회의 우려 깊은 목소리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정부는 성실한 노력을 하지 않았었다.

그 결과, 재한 25만 이주 노동자는 산업현장에서 성실히 제 몫을 다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생존권을 변론할 힘 마저 없는 한국 경제의 아웃사이드로 전락하여 왔다.

그런데 새로운 정부가 노사정 합의를 통해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수립으로써 어려운 경제 상황의 돌파구를 찾을 것이라고 기대해 마지 않던 25만 이주 노동자의 일말의 희망은 여지없이 깨어지고 말았다.

우선, 정부는 노사정의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협력이라는 대의를 무시하고, '외국인 산업인력 정책 심의위원회'라는 독자 기구를 구성함으로써 독선을 범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 국내외적인 비난을 받아왔던 기만적인 '연수생제도'를 모태로 하는 '연수취업제 시행령'을 확정, 시행키로 함으로써 스스로 도장을 찍은 '노사정 합의안'을 한 조각 휴지로 만들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98' 해외인력 정책과 같은 정부의 안에는 25만 노동자가 눈에 보이지 않은 것이다. 불법체류자는 어떻게 해서든 내보낼 것이고 산업연수생들은 기간이 끝나면 돌아가게 하면 그만이라는 생각만이 있을 뿐이다. 그들이 처한 생존권 위협에 아랑곳하지 않고 토사구팽의 비인간적 관점만 지속되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조치들이 시행되는 것은 한국 이주민 노동시장의 치명적 오류를 확산하는 것이므로, 우리는 다음의 제안 사항을 위하여 국내외적인 연대와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다음 사항에 대한 협력을 약속하면서 정부에 엄중히 촉구하는 바이다.

- 연수취업제를 철회하고 합리적인 이주노동자 문제 해결과 노동정책 수립을 위한 노사정과 외노협 등 관계 단체 연석 기구를 구성하자.
- 귀환 희망자의 자진 출국을 위하여, 임금 체불등 미해결 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 불법체류자 벌금제도를 철폐하여 출국을 희망하는 노동자를 우선으로 자율귀환 시키자.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